

전주매일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동동 344-2) 한광대학교병원 5층 1호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7년 1월 13일 금요일 (음 12월 16일) 제1726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새해에도 지역경제를 위하여” 12일 전주 르윈호텔에서 열린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전북지회 2017년 신년인사회에 송하진 도지사과 박영자 회장, 김승환 교육감, 김승수 전주시장 등 참석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관련기사 6면>

전북산 한우고기 홍콩 수출 재개

구제역 발생으로 중단됐던 도내산 한우고기 홍콩 수출이 재개된다. 전북도는 12일 구제역 최종발생일로 1년이 경과함에 따라 수출위생조건을 회복해 오는 19일부터 재개한다고 밝혔다. 수출업체는 익산에 소재한 축산물도매시장인 (주)축림으로 홍콩 유통업체와 계약을 맺고 올해 도내산 한우고기 총 50톤, 한우 200두 규모 분량을 수출할 계획에 있다.

**도, 구제역 최종발생
1년 경과에 따라
19일 1차 물량 수출**

이번 1차 물량은 한우고기 1.5톤, 한우 6두 분량 계획으로 16일 도축을 시작으로 가공, 검역을 거쳐 19일 최종 비행기를 이용해 수출하게 된다. 전북도는 축산물 안전·위생 유통시설 구축 등 수출산업 기반 마련을 통해 지난 2015년 12월 최초로 도내산 한우고기를 홍콩에 수출하는데 성공했으나 이듬해 1월 구제역 발생으로 수출이 전면 중단됐다. /인재용 기자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3개월... 소비자들이 희망하는 선물용 농식품은?

4~9만원대 과일류 · 잡곡

한우 · 화훼류는 구매의향 감소... 고를때 세트 구성한 상품 선호

소비자는 선물용 농식품으로 4만원~9만원 정도 가격대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과일류, 잡곡 등 곡물류 품목이 가성비 대비 우수한 관심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농촌진흥청은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소비자의 선물용 농식품 구매의향'을 설문조사해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농촌진흥청의 전국 농식품 소비자 패널 1,437가구를 대상으로 지난 11월 25일부터 12월 27일 동안 실시했으며, 이 중 1,258 가구의 응답내용을 분석했다. 선물용 농식품에 대해 연령, 가구소득, 가족 수와 관계없이 최근 구매를 줄였다고 응답한 소비자가 40% 이상으로 나타나 부정청탁 금지법의 영향이 실생활에서도 확인됐다.

식품 구입액 변화가 없다는 대답이 55%로 조금 더 많지만, 줄였다는 소비지도 42.7%에 달했다. 앞으로도 구매를 줄이겠다는 응답이 41.5%로 나타나 부정청탁금지법으로 인한 선물용 농식품 구매의 영향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품목별로 보면 한우, 화훼(꽃, 난)는 구매감소 의향이 뚜렷했으며, 대체품으로 과일류, 잡곡 등 곡물류의 구매의향이 늘어날 전망이다. 또한 기존 선물용 농식품 대신 과일류를 구매하겠다는 응답이 높았으며, 다음으로 참(들)기름 > 잡곡 등 곡물류 > 버섯 순으로 나타났다. 그간 상대적으로 선물 수요가 적었던 농산물을 선물용 농식품으로 적극 개발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선물용 농식품 구매 희망가격은 평소보다 명절이 높게 나타났으며, 실속

형 상품화로 가격부담을 줄인 상품 선호했다. 즉, 선물용 농식품 구매 희망가격은 평소 평균 3만원~6만원 수준을, 명절에는 평소 대비 1.5배인 4만원~9만원 정도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비자가 선물용 농식품을 고를 때 소포장으로 중량을 줄이거나 포장·용기를 간소화하고, 세트 구성해 가격 부담을 낮춘 상품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진흥청 환경친화적 기술협력국장은 "가격부담을 줄인 실속형 상품개발로 수요를 촉진하면서 소비자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마케팅 전략개발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지속적인 선물용 동향 모니터링, 소비패턴분석과 함께 소비자가 원하는 포장·디자인 개선, 현장 컨설팅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도 · 일요일신문 쉽다.”

지역행복생활권 공모사업 도 · 시군, 협력체계 구축

지역행복생활권 공모사업에 사업발굴 단계부터 도와 시군이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전북도는 지역행복생활권 사업공모에 도내 4개 생활권 및 12개 시군이 참여해 총 19건의 사업을 지역발전위원회에 신청·접수했다. 이번 지역행복생활권 공모사업은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가 총괄하고 농림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대표적인 지역생활권 사업으로 시·군간 연계 협력사업인 선도사업과 취약지역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새마을사업이 해당된다. 지역생활권 사업은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가 총괄하며 사업집행은 농림부가 추진하고, 사업기간은 3년 범위내에서 탄력적으로 적용하며 총사업비의 70%를 국비로 지원하게 되며 최대 30억원~50억원을 지원하게 된다. 도에서는 2017년 신규사업 공모를 위해 사업발굴 단계부터 전북연구원, 시군과 머리를 맞대고 논의했으며, 연구용역, 시군 관계자 회의 개최, 생활

권협의체 운영(도, 시군)과 지역발전위원회, 도, 시군 및 전문가와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공모사업 대응을 위한 3회에 걸쳐 시군 관계자 간담회 개최하고, 신규사업 발굴 연구용역과 시군 생활권협의체, 도 생활권발전협의회를 개최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특히, 전북 생활권발전협의회에서는 사업의 필요성, 시군간 연계성 등 사업공모선정 지표를 기준으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며, 참여 시군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올해 공모사업에 선도사업은 도내 4개 생활권에서 모두 신규사업을 발굴·접수했으며, 새마을사업은 도내 12개 시군이 참여하는 등 도시군의 협업과 공모사업 추진 열정이 돋보였다. 이번 공모사업은 1월 중에 서류심사 통과한 사업에 대한 대면·현장평가가 이뤄지며, 최종 결과는 2~3월에 발표될 예정으로 도에서는 많은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대면·현장평가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인재용 기자

도내 여성단체 “도 인권팀장 성범죄... 전북도가 책임져야”

성폭력예방치료센터 등 전북도내 50여개 여성단체는 12일 전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도는 이번 성범죄 사건에 반성과 책임의식을 갖고 여성에 대한 폭력 근절과 인권 증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관련시진 5면> 이들은 “최근 인권단체 활동 경력을 가진 전북도청 공무원이 여대생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며 “심지어 해당 공무원은 여성이 거부할 수 없는 정도로 유혹했다고 항변하는 등 자신의 범죄를 합리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주완산경찰서는 지난해 12월30일 여대생을 모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전북도 인권담당 사무관 전모(4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뉴스

“정유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김제시의회
http://council.gimje.go.kr

시민의 생각이 김제시의회의 생각입니다.